■ 이달의 제언 ■

낙농진흥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 병 달 회장
전국 낙협 협의회

식량안보 체제에서 보던지 국토보전의 면에서 보아 낙농은 쌀농사와 함께 국가 존속에 있어서 꼭 보호 발전 되어야 할 업종임에 틀림없다.

이 낙농이 개방이라는 국제적 문제로 지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되어 오랜동안의 숙제인 집유일원화를 모색하며, 낙농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비를 해 보겠다고 마련된것이 낙농진흥법 개정안이다. 이것은 민생문제중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성안된지 3년 이건만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음은 안타갑기보다도 분노를 느끼게 한다.

이것이 빨리 상정되지 않는데에는 대강보아 두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본다.

첫째, 정부에서 지금까지의 가격지지 정책을 훌렁벗어버리고 전적으로 시장가격 메카니즘에 맡겨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와

둘째, 집유를 위시한 낙농전반을 지역축협에서 장악해야 되겠다는 것이 축협 중앙회장의 선거와 얼켜 파워로 작용하였던 탓이다.

첫째 문제부터 보자,
개방이라는 국제적 시류에 당면하여 우리 정부로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마는 전적으로 가격 메커니즘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낙농이 아직 안정적 기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낙농을 뜨거운 햇살에 고사(故死) 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 상한선을 넘을 때에만 수업허용, 하한선 이하일때에는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이 선명히 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문제는 쉽게 말하여 낙농을 축협에 넣는냐, 새로 생겨나는 낙협에서 맡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당연히 낙농인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축협중앙회나 정부에서 간섭하거나 힘겨루기로 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낙농은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 품종개량, 사양등 전반에 걸쳐 낙농인들의 단결과 협동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유체화만 하여도 낙농인들의 협동체가 잘 운영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며, 앞으로 지역단위로 심각한 문제로 부상될 쓰레기 처리 같은 것도 우리의 협동체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공업이 분업으로 발전된것이라면 농업은 협동을 통하여 발전되는 것인데 진정 한 낙농인을 위한, 또, 낙농인으로 이룩되는 자율성을 갖춘 협동체가 낙농진흥의 중추가 될것을 요망하여, 낙진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낙농을 위한 여러 단체도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